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마서 1 : 17, 레위기 19 : 2)

동성애대책위원회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404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8(내선9602) 전송 (02)747-0043 담당 : 이명숙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1151호

시행일 2017. 8. 10.

수신 노회장

참조 사회봉사부장

제목 헌법개정을 통한 동성결혼과 동성애의 합법화 반대성명서 및 협조요청 사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현재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논의 과정에서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움직임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교단장회의"(대표회장 : 이성희 총회장, 전명구 감독회장, 김선규 총회장)의 "한국교회는 헌법개정을 통한 동성결혼과 동성애의 합법화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서에 입장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 및 협조사항을 공지하오니 지 교회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별첨1> 성명서 한국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동성결혼과 동성애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별첨2>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진행과정 및 협조요청 사항

총 회 장 이 성 희

동성애대책위원장 이 화 영

별첨1> 성명서

한국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한 동성결혼과 동성애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작금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반 법률과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깊은 연구와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금번 헌법 개정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헌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헌법 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담보하기 보다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해체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가치와 윤리적 토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과 대립을 불러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1. 우리는 '양성 평등' 을 '성 평등' 으로 대체하여 '가정과 가족의 기본질서' 를 무너뜨리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녀들을 건강하게 출산 양육하므로 세대가 이어지며, 이들 다음세대가 곧 국가의 미래이다. 2017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비율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고, 이것은 2014년에 비하여 더 높아진 것이다.

2. '동성결혼' 과 '동성애' 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회 개헌특위는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 항목으로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인종, 언어,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다'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포함하려 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매우 중대한 가치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피하려는 시도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헌법을 통해 합법화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함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개정을 반대한다.

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회원 21개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은 현행 헌법의 개정에는 찬성하나, 가정과 가족의 기본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관련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과 기독교계의 이러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26일

한 국 교 회 교 단 장 회 의

대표회장 :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 김선규 목사(합동 총회장) 이성희 목사(통합 총회장)

대변인 : 유관재 목사(기침 총회장)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유홍준 총회장) 그리스도교회협의회(신조광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이동춘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신상범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영훈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김철환 총회장) 기독교한국침례회(유관재 총회장)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김영수 감독) 대한예수교복음교회(임준수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이승헌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배광호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이종승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지태영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성희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최규석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김선규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최철용 총회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김원교 총회장) 한국구세군(김필수 사령관) 한국기독교장로회(권오륜 총회장) -21개 회원교단

별첨2>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진행과정 및 협조요청 사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활동기간 동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내용으로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긴급한 대책이 요구됨.

1. 현황 :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및 보고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 (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 외의 성소수자, 그것이 간절한 성소수자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 가족이라고는 법적으로 인정 못받겠지만 가족과 유사한 그런 공동체의 보호가 문제됐을 때는 그것도 보호 가능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3일 전체 회의) 현행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그 다음에 별도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 없는 것으로 되었음 (2월 7일 소위원회 회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6월 19일 회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 특위의 36명 국회의원과 5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거의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회 개헌 특위의 향후 일정

- 2017.07.17 :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및 국가원로초청 개헌토론회

7월말~8월말 : 국회방송 '개헌 특별기획' TV토론, 개헌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시민단체·전문가 등 참여

8월말 :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초안 작성

8월말~9월말 : 영남권(부산/대구), 호남·제주권(광주/전주), 충청권(대전/청주),

수도권(인천/수원/의정부), 강원권(춘천) 등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 개최

10월 :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2000명 규모로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 다양한 국민 초청 개헌 의견 청취

- 2018년. 2월 : 여야 합의의 개헌안 도출

2018년 6월 :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3. 요청 사항

-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해서 간청을 해야 함

국회의원 지역구의 목사님들이 면담 신청해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을 막아달라는 의견 및 입장 전달

- 참고 :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 분포

밑줄을 그은 분은 동성애, 동성결혼 관련 주제를 다루는 제1소위원회 소속임

<정당 분포> 더 : 더불어민주당, 자: 자유한국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서울 : 이인영(더, 특위 간사) 구로, 전현희(더) 강남, 진선미(더) 강동, 이종구(바) 강남

인천 : 홍일표(자, 특위 간사) 남구

경기 : 백재현(더) 광명, 김경첩(더) 부천시 원미구, 이종걸(더) 안양시 만안구,
전해철(더) 안산시 상록구

울산 : 이채익(자) 남구

부산 : 하태경(바, 간사) 해운대, 김정훈(자) 남구, 최인호(더) 사하

경남 : 이주영(자, 특위 위원장) 마산 합포구, 노회찬(정) 창원시 성산구

대구 : 윤재옥(자) 달서구, 정종섭(자) 동구

경북 : 이철우(자, 특위 간사) 김천, 최교일(자) 영주, 문경

광주 : 송기석(국) 서구, 천정배(국) 서구

전북 : 김관영(국, 제1소위원회 위원장) 군산

충남 : 김종민(더) 논산, 계룡, 성일종(자) 서산시 태안군

충북 : 변재일(더) 청주시 청원구, 이종배(자) 충주

대전 : 박병석(더) 서구, 이상민(더) 유성구, 정용기(자) 대덕

제주 : 강창일(더) 제주시

비례 : 강효상(자), 이상돈(국), 김성태(자), 이태규(국), 권미혁(더), 이재정(더)